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

플랫폼 노동·배달업종 분과위원회 발족

강금봉 전문위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10월 이후 IT 인력중개 플랫폼의 규범 마련과 IT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그동안 IT와 SW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IT·SW 인력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발 인력과 프로젝트가 매칭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투명한 플랫폼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IT·SW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그 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0.5.13. 전체회의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안)」을 최종 채택하였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

범(Code of Conduct) 실행 추진이다.

전국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대행 종사자는 5만~1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배달대행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유상운송 이륜차의 높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하여 배달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사고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업종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0.5.27.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배달 플랫폼 이해관계자, 노사 단체, 정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발족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후에는 배달종사자의 민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배달산업의 공정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을 위한 사회적 협업모델을 논의하였다. 제조업의 디지털화인 스마트공장 확산은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생산방식의 변화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정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20.7.23.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1주년을 기념하여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사람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 도출할 예정이다.